

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방안

-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캠코의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외에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 가능

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외에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.

’20.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여 왔다.

<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>

- ◇ (운영기간) '20.6월~'23.12월 종료예정
- ◇ (협약금융회사) 은행, 저축은행, 여전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·새마을, 생보·손보
- ◇ (대상채권) 개인 무담보대출*로서, '20.2.1~'23.12.31 중 연체발생채권
 - * [신용대출] 대출잔액 전체, [담보·보증대출]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
- ◇ (운영실적) 총 5,158억원, 77,284건의 연체채권 매입*(23.4월말)
 - * 매입실적의 대부분(건수 대비 98.2%)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

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외에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협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.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.

또한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여야 하고,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.

<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>



「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」 협약은 6월 중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, 상호금융,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02-2100-2993)
	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은 (02-2100-2611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길성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이희성 (02-3145-6773)
<공동>	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	책임자	처 장	조성각 (051-794-3850)
		담당자	팀 장	최기현 (051-794-3875)